# 민주 "이상민 '유쾌한 결별' 발언 분열 조장" 엄중 경고

언론 인터뷰서 분당 주장 반복…총선 앞 계파 갈등 촉발 가능성 지도부 "명백한 해당 행위" 당헌·당규따라 징계 가능성 시사

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의 최근 '분당(分黨)' 발언을 당의 분열을 조 장하는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 경고하기로 했

정치권에선 이상민 의원의 발언 논란이 내년 총 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의 친명-비명 진영간의 충 돌을 촉발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.

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"이상민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 왔다"며 "오늘 회의에서 지도부모든 분과 최고위원 들은 (이 의원의 분당 발언이) 명백한 해당 행위이 니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"고 밝혔다. 그러면서 "당 대표도 강하게 말했으며, 반대 의견은 없었다"고 설

지도부가 만장일치로 경고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의원이 분당 언급을 이어갈 경우 당헌·당규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.

하지만, 당내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발언이 당내 주류세력의 일방통행을 견제하기 위한 쓴 소리 성 격이 강한 것 아니냐며 지도부가 보다 폭 넓게 포용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.

강성 비명(비이재명)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"유쾌한 결별도 각오해 야 한다"며 분당론을 꺼냈다. 이 의원은 이날도 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에 나와 "가야 할 방 향이 다르고 어떠한 공통 기반도 없는데 그냥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한 지붕 위에 같이 있 으며 매일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자리싸움, 권력 싸움이나 할 바에는 유쾌하게 결별할 각오를 해야

그는 이어 "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'분열은 나쁜 것이고 통합은 선'이라는 고정된 프레임은 극복해 야 한다"며 "쿨하게 유쾌하게 결별하고 선의의 경 쟁,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 경쟁을 해서 1, 2당이 되 면 되지 않겠는가. 국민의힘은 3당이 되게 하고"라 고 말하기도 했다.

그는 진행자가 '유쾌한 결별이 되려면 재원이 해 결돼야 한다. (교섭단체 구성 요건인) 20명 이상이 모여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느냐'고 묻자 "상황에 따라서(가능하다)"라고 답했다.

이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경고 결정 소식이 알려지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"제가 해당 행위를 했음을 이 유로 경고를 운운했다고 하는데 황당하다"며 "저는 전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"고 반발했다.

그러면서 "오히려 당 지도부 등을 포함해 당내에 있어서 민심에 반하고 당에 해를 입히는 행태에 대 해 성찰하기를 바란다"고 덧붙였다.

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친명과 비명간의 전초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 도 제기한다. 이 의원이 지도부의 경고에 반발하고 강한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징계가 현실화된다면 판 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.

하지만, 전반적인 당 내외 분위기는 이 의원의 발 언이 좀 심했다는 분위기여서 문제가 더 확산되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.

이와 관련, 당내 핵심 관계자는 "이 의원의 발언 이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것이 당내 전반적인 평가"라 면서도 "하지만, 지도부가 경고 결정을 내린 것은 당의 결집을 위해 그리 좋아보이지도 않는다"고 말

/임동욱 선임기자 tuim@kwangju.co.kr

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.

## 이재명 "정권 노동탄압 한국노총과 연대"

정책협의회 개최…"5인미만 사업장 노동권 강화 등 법제화"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"정권의 노동 탄압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"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맹비판했다.

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 에서 열린 민주당-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서 이같이 말하고 "(정부의) 반노동적 행태가 노 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.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함께 고민해 야 한다"고 말했다.

이 대표는 "무차별적 '건폭몰이'로 양회동 열사 가 희생되고,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노동자를 향 해 정권은 폭력 진압으로 대응했다"며 "국민의 생 명과 건강을 위협할 '주 69시간제'에 대한 미련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 같다"고 지적했다.

그는 "윤석열 정권은 지금까지 태도로 보아 주 권자이기도 한 노동자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 는 것 같다"며 "오직 초부자, 초대기업만을 위한 정 책 수립에 목을 매고 있다"고 비판했다. 이어 "정권 의 노동탄압, 노동개악 폭주에 맞서 한노총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"고 덧붙였다.

이 대표는 "올 하반기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의 노동 기본권 강화와 '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' 법제화 성과를 반드시 내도록 하겠다"며 "특 히 노동자의 합법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(노란봉투법 입법)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약속했

### 여야 11인 원로회 출범

여야 정치 원로들이 양극단으로 흐르는 현 정치 상황을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.

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신영균 상임고문 과 더불어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이 주축이 된 원로 회가 제75회 제헌절인 오는 17일 공식 출범한다.

원로회에는 두 상임고문 외에 강창희 김원기 김 형오 문희상 박희태 임채정 정세균 정의화 전 국회 의장 등 8명의 전직 국회수장과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까지 총 11명이 함께한다.

이들 중 일부는 지난달 30일 정대철 헌정회장의 개인 사무실에 모여 '11인 원로회(가칭)'의 공식 출범을 준비하는 사전 모임을 했다.

이 자리에서 원로들은 "여야의 극단 정치를 끊 어내자"고 뜻을 모았다고 한다.

/연합뉴스

# 여의도 브리핑

### 민형배 "광주에 회생법원 설치해 달라"

#### 서경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

더불어민주당 민형배(광산을)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회에서, 법원의 사건처리 지연 개선을 강조했다. 또 회생사건은 빠른 처리가 핵심이며,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.

특히 광주에 회생법원이 없어 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된다며,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게 광주광역 시 회생법원 설치 의견을 물었고, 이에 서 후보자 는 "적극 찬성이다"고 답했다.

서 후보자는 "국민들이 (사건처리 속도의 지역 별) 편차가 심해 주소를 옮겨서 신청한다고 한다. 편차 해소와 신속한 도산재판을 위해 회생전문법 원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"고 답변을 이어갔다.

민 의원은 "입법은 저희 들이 할테니 대법관이 되시 면 대법원에서도 관심을 가 져달라" 당부했고, 서 후보 자는 "적극 지원할 생각이 다"고 화답했다.

>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 일 광주와 대전에 회생법원

을 설치하는 '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 한 법률'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. 경제 악화로 개 인과 기업의 회생 • 파산 신청이 늘었지만 사건 처 리기간이 급격히 늘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, 최소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자 는 취지이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##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 개선안 논의

#### 강은미 의원 국회서 토론회

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공운수노조와 공동으 로 지난1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'돌 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자 건강 권 보장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'를

인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노동자, 보육교사, 장애 인활동지원사들을 비롯해 노무사, 변호사, 정부관 계자 등이 참석해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.

강은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서 "돌봄 노동자는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지만,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도 마음껏 쉴 수 없는 노동조건 속에 있다"면서 "돌 봄노동자의 인권은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과도 밀



접한 연관있다고 지적하면 서 예산확보와 돌봄노동자 의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 해 노력해야 한다"고 강조 했다. 이날 행사에서는 일 선 돌봄현장에서 노동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생생한 현 장증언이 이어졌다.

한편 526명의 설문조사와 집단인터뷰 진행 내 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발제에서는 응답자의 18.8%가 산업재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, 사 업장에 유급병가를 시행한다는 응답은 49.4%에 불과했다. 돌봄노동이 서비스 이용자와 함께 하는 노동이니 만큼 서비스 대상자로부터의 폭언폭행 경험은 47%나 됐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

